

경제 살리는 정기국회 되기를 기대한다

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

최근 경제 전망을 종합하면 ‘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,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어 안심할 수 없다’ 라고 요약된다. 지난 7월 정부는 ‘새정부 경제정책방향’ 발표에서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와 함께 11조원 규모의 추경 효과로 올해 3%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바 있다. 하지만 10일 후 기재부의 ‘최근 경제동향’ 분석에서는 주력업종 생산 부진, 60% 이상 중국인 관광객 감소, 대북 및 한미FTA 문제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.

이와 같은 여건에서 곧 9월 정기국회가 열린다.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국회라는데 의미가 있다. 이러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. 우선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입법화하고 현재의 규제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. 또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입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, 우리 기업인들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.

일 자리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오랫동안 계류돼 온 경제활성화법을 공문화하고 입법화하는 것이다. 과거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, 관광진흥법, 크라우드펀딩법 등 9개의 경제활성화법안이 시행될 경우 66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발표한 바 있다. 여기에 더해 규제프리존특별법, U턴기업지원법 등과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. 새정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81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회의 경제활성화법 추진이 꼭 필요해 보인다.

더불어 경제활성화법과 함께 규제개혁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. 대한민국 10대 산업의 평균 나이가 올해로 약 47세로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. 이 때문에 기존 산업에서 획기적으로 일 자리를 만들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. 이제 새로운 산업 없이 새로운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. 더욱이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려면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이 과학과 기술이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를 일일이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. 이제 우리 규제시스템을 법률

상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때이다.

둘째로,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하려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에 대해 신중하여야 한다.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제·개정이 필요한 법령이 무려 465건에 달한다고 한다.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했다가 자칫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려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. 따라서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,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.

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 국회 국정감사 기간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다. 때로는 특정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받아 입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손실을 입기도 한다.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킬 우려마저 있다. 다가오는 정기국회는 우리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.